

「분뇨·하수처리연계사업」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106
----------	-----

발의년월일 : 2004. 6. 17.
발 의 자 : 최재근 의원외 14인

1. 주 문

장립하수종말처리장 분뇨·하수처리연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활권 및 주변 환경침해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함.

2. 제안이유

- 종전의 해양투기 분뇨처리방법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의 감전동 소재 위생처리장에서 우리구 소재 장립하수처리장으로 송분관료를 통해 이송하여 분뇨와 하수를 연계하여 병합처리 하기 위해 사업추진함에 따라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낙동강하구 오염에 대한 시설의 보완대책이 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기 어려워 별도 사업 시행전 선 이행사항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보내는 곳

부산광역시(환경국)

- 「糞尿·下水處理連繫事業」 再檢討를 위한 -

建 議 文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분뇨에 대하여 종전의 해양 투기방법을 해양오염 등을 이유로 사상구 감전동 위생처리장에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한 뒤 송분 관료를 통해 우리구 소재 장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분뇨와 하수를 병합 처리해 방류하는 '분뇨·하수 연계처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 1차 33만톤, 2차 28만톤도 현재의 시설로 처리하지 못하여 비만 조금 와도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사하구 장림어촌계등 12개 어촌계 어민들은 해상관로를 갖추지 않고 하수구로 바로 방류하여 바다의 저염화 및 부영양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함께 각종 양식어업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고, 아울러 인근 주민들도 각종악취에 대한 생활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어업 피해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서도 집행을 미루고 있어 시의 안일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부산시가 지난 94년 환경부로부터 장림2단계 하수처리시설건설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유입하수의 3차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하기로 하고도, 실제로는 지난 2001년 10월 시설가동 후 지금까지 2차 처리만 한 채 방류하여 SS기준치를 초과하여 부담금도 납부하는 등 시설 보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3차 처리시설 준공 때까지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가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분뇨의 해양투기 방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처리대상이 분뇨인 만큼 만에 하나라도 처리과정이 불투명하면 악취에 따른 민원과 하구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공법이나 시설관리가 엄격하고 빈틈이 없어야 하며, 현재 우리의 환경기술이 기초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병합처리 방법이 사업비가 가중되고 새로운 환경문제와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의 분뇨처리량은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창원시, 마산시, 합천군처럼 실제 가동에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뻔한 일임에도 그동안 나타난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3,400여톤의 분뇨를 하수와 병합 처리하게 되면 낙동강 연안 하구의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파괴로 이어져 수많은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것으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하구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제반 주변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구민들은 물론 특히 장림,신평주민들과 같이 이번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첫째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행조건인 3차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둘째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구는 관로를 통해 유속이 있는 하구와 상당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곳으로 설치 할 것과

셋째 분뇨 병합처리에 대한 장림, 신평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대표단이 선진지를 방문하여 처리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과

넷째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처럼 두꺼비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분뇨·하수연계처리 사업을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사하구의회의원 일동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4. 6. 2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일동